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최 인 범 김 신 우[†] 이 형 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 피해자형 설명법안, 처벌판단, 보상판단,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공감

* 이 논문은 2018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4955).

† 교신저자 : 김신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노원구 광운로 20, E-mail : shinwoo.kim@kw.ac.kr

‡ 교신저자 : 이형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노원구 광운로 20, E-mail : hyung@kw.ac.kr

서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과 아이의 이름, 나이, 그리고 기부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이어진다. 그 동안 흔히 보았던 기부 캠페인 광고가 떠오를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인식 가능한 기부 수혜자를 내세웠을 때 기부금이 증가하는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의 대표적인 예이다. “통계적 피해자와 비교하여 특정 불운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도움이 집중되는 현상”(Schelling, 1968)을 뜻하는 이 효과는 주로 기부를 비롯한 도움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꼭 도움행위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일까.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사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조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소라, 2019). 민식이법을 비롯해 ‘신해철법’, ‘설리법’, ‘하준이법’ 등 피해자의 실명을 법안명에 붙이는 형태를 피해자형 실명법안(實名法案)이라고 한다. 피해자형 실명법안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 법안의 필요성과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법안의 실질적 내용보다 사람들의 정서에만 호소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홍완식, 2016). 본 연구는 이처럼 특정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법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의지가 증가하는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를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의 법적 판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법률적 요인과 무관한 피해자 특성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는 배심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을 낮추었고(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배심원의 처벌 판단은 관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최승혁, 허태균, 2012).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제공하는 피해자 신상 정보의 유무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과거 연구들은 인식 가능한 피해자가 추상적 피해자와는 달리 공감과 도덕적 책임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etherstonhaugh, Slovic, Johnson, & Friedrich, 1997; Kogut & Ritov, 2005; Small & Loewenstein, 2003). 또 반대로 가해자를 인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Small & Loewenstein, 2005). 이중처리모형(dual-process model)과 휴리스틱-시스템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한 개인과 추상적 다수를 대할 때 서로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사용한다. 추상적 다수를 대할 때는 인지적인 반응이 우세한 반면 인식 가능한 개인에게는 강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Hamilton & Sherman, 1996; Sherman, Beike, & Ryalls, 1999). Loewenstein, Small과 Strnad(2006)은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곤경에 처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인식 가능한 타인 효과(Identifiable other effect)’라고 정의하였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도움 행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Erlandsson et al., 2015; Slovic, 2007; Small & Loewenstein, 2003). 심지어 대상의 신상을 몰라도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Small & Loewenstein, 2005). 그런데 하먼 Jordan, Amir과 Bloom(2016)의 실험에서는 이타적 행동을 예측하는 공감 성향인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도움행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 효과가 국가적 가난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 같이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일 때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 Kogut(2011)는 곤경의 책임이 피해자 내부에 있다고 인식한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같은 에이즈 환자에게도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유전인지, 타인에 의한 감염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감염에 의한 에이즈 피해자에게는 다수의 추상적 에이즈 피해자보다 기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특히 이런 경향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한 세상 가설(just world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고 믿으며 각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받는다고 믿는다(Lerner, 1980). 이 믿음은 곤경에 처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타인이 겪는 곤경의 책임이 대상에게 있다고 믿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냉담하고 혹독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Schneider & Montada, 1998). 반대로 불운의 책임이 대상의 외부에 있다고

인식한다면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과 타인의 불운 사이에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고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움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Lerner & Simmonds, 1966).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Kogut(2011)는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불운의 책임이 피해자 외부에 있다고 인식될 때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Loewenstein, Small과 Strnad(2006)의 주장대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기부를 비롯한 도움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피해자형 실명법안과 같이 피해자 인식이 일반인의 법적 판단(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기부 상황이 아닌 범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을 실험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사건의 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폭력범죄, 아동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판단자로 하여금 너무 강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해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처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한쪽의 피해자에게 감정적 몰입을 할 가능성과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교통사고를 사건의 배경으로 정하였다.

실험1에서는 이런 법적 판단의 실험적 상황을 통해 ‘피해자 인식 - 피해자 도움’, ‘가해자 인식 - 가해자 처벌’이라는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 인식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을 높이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교통

사고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기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taglione & Barnett, 2003). 이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판단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판단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험2에서는 더 나아가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했다. 과거 연구(Kogut, 2011)에서는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피해자에게는 에이즈에 대한 판단자의 편향으로 인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에이즈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도움행위가 줄어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교통사고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별히 긍정적인 성행의 피해자가 제시됐을 때는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부정적 피해자에게는 낮은 처벌과 보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 앞서 예측한 효과가 배심원의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인식된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였다.

더불어 이전 연구(Jordan, Amir & Bloom, 2016)와 마찬가지로 배심원의 공감적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처벌 판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관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

과 정서적 몰입이 가해자 처벌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공감적 관심 성향이 높을수록 배심원은 적은 처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öberg, 2015). 이같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공감적 관심 성향이 처벌과 보상에 대한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를 인식했을 때의 제3자의 공감적 관심성향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적인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험1

실험1은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무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판단을 위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범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시나리오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시하는 조건과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을 모집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00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인바이트(invight.co.kr)를 통해 실시하였다. 온라인 74명, 오프라인

66명 총 140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해 총 135명(남성 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건 별로 비인식 조건의 참가자 67명(남성 34명), 인식 조건의 참가자는 68명(남성 33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9세부터 30세로 평균 연령은 24.82세($SD=3.09$)였다.

측정도구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BJWS)

참가자들의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Lucas 등(2007)이 개발한 척도를 김은하와 동료들(2017)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그리고 각각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해 총 네 가지의 하위척도를 가진다.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결과가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반면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노력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Adams, 1965). 개인적인 믿음(BJW-self)과 일반적인 믿음(BJW-other)은 각각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공정성과 ‘타인’에 대한 세상의 공정성을 의미한다(Lipkus, 1991).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0: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7: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로 설문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K-IRI)

개인의 공감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avis(1983)의 IRI 척도를 사용해 참가자 개인의 공감성향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IRI의 한국어판 척도(강일 외, 2009)의 28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0: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5: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공감성향을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관점 수용(perspective taking), 환상(fantasy),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5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시나리오

교통사고 시나리오는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운전자는 검찰에 의뢰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2018년에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실제사건이라는 내용과 함께 참가자에게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읽을 것을 요청하였다.

교통사고 시나리오에서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여서 각 실험 조건을 구성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배제한 사건 내용을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실험 구성 상 통제조건에 해당하며 이것을 ‘비인식’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통제조건에 피해자의 이름, 나이, 키 등의 신상 정보(V_i ; Victim information)를 추가한 조건으로 ‘인식’ 조건이라고 하였다. 참가자는 무작위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 및 보상 판단을 수행하였다.

표 1. 실험1, 2의 조건 별 시나리오 구조 (시나리오 내용은 부록 참고)

조건명	조건 별 내용 구성	시나리오 구조	실험 구성	
			실험1	실험2
비인식	사건 내용(E)	E	O	O
인식	사건 내용(E)에 피해자의 신상정보(V _i) 추가	E+V _i	O	
긍정인식	사건 내용(E)에 피해자의 신상정보(V _i)와 긍정적 성행 정보(V _p) 추가	E+V _i +V _p		O
부정인식	사건 내용(E)에 피해자의 신상정보(V _i)와 부정적 성행 정보(V _n) 추가	E+V _i +V _n		O

처벌판단 및 보상판단

참가자는 시나리오를 읽고 배심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벌과 보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였다. 처벌판단은 가로로 길게 나타낸 20점 척도 위에 V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척도 위에 ‘*법에서 규정된 양형 기준 내에서의 최소 양형*’을 0점, ‘*최대 양형*’을 20점이라고 표시하였다. 척도의 정중앙인 10점에는 위와 같은 사건의 ‘*평균 양형*’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였다.

보상판단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주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합의금 역시 양형판단과 마찬가지로 가로 선분 위에 0점을 ‘*통상적 합의금의 최소수준*’으로 20점을 ‘*최대수준*’으로 제시하고 가운데 10점을 ‘*통상적 합의금의 평균수준*’이라고 나타냈다.

본 척도는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적 요인을 모두 제외한 채로 이전 판례의 평균 양형과 합의금이 10점이라는 준거점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반응의 변산을 줄임으로써 조건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절차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 모두 동일한 내용과 구성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먼저 개인 성향을 묻는 BJW 척도와 IRI 척도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읽고 배심원으로서 처벌과 보상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나이, 종교 등의 인구통계적 정보와 운전면허 취득여부, 법 관련 전공여부 등 종속변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요인에 대해 묻은 뒤 설문은 종료되었다. 설문 작성의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분석 방법

집단 간의 종속변인 값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평균 양형과 평균 합의금으로 제시한 10점과 참가자의 응답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개인의 공감,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Pearson의 상관계수(r) 검정과 추가로 피해자 인식과 처벌, 보상판단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성향이 조절효과

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Rstudio(Version 1.2)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 과

피해자 인식 효과

그림 1은 실험1의 각 집단의 양형 판단과 합의금 판단의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제3자의 처벌, 보상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인식 집단과 인식 집단의 양형 판단과 합의금 판단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처벌과 보상 모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양형 판단: $t(135)=0.03, p>.05$; 합의금 판단: $t(135)=0.95, p>.05$).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 내에서 평균 양형, 평균 합의금으로 제시한 10점과 참가자들의 판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인식 집단의 양형 판단($M=10.93, SD=3.47$)과 합의금 판단($M=12.36, SD=3.37$), 그리고 인식 집단의 양형 판단($M=10.95, SD=3.12$)과 합의금 판단($M=11.83, SD=3.12$) 모두 1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양형 판단

(비인식: $t(67)=2.56, p<.05$, 인식: $t(68)=2.27, p<.05$)과 합의금 판단(비인식: $t(67)=5.81, p<.001$; 인식: $t(68)=4.94, p<.001$)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이 배제된 시나리오를 읽고 이전 판례의 평균 처벌과 보상보다 높은 처벌, 보상 판단이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가해자 처벌 편향’, ‘피해자 보상 편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 논의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비인식 집단과 인식 집단 모두에서 IRI 척도를 사용해 측정한 공감과 양형 판단, 합의금 판단과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BJW를 통해 측정한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믿음이 피해자 인식과 양형, 합의금 판단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가자들의 피해자 인식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 그리고 분배공정성에 대한 믿음(DJW)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BJW: $\beta=.09, p<.05$, BJW-self: $\beta=.12,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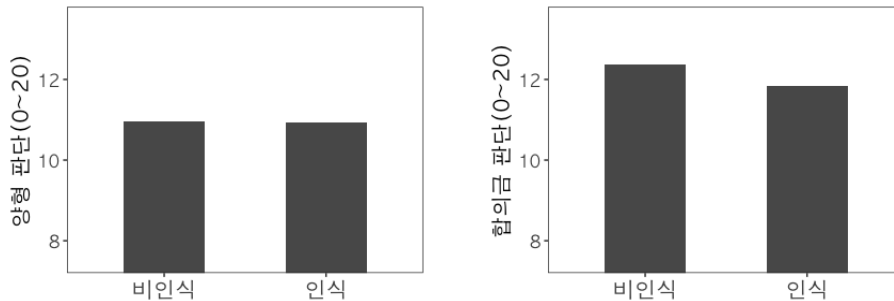


그림 1. 실험1 두 조건의 평균 양형판단과 합의금판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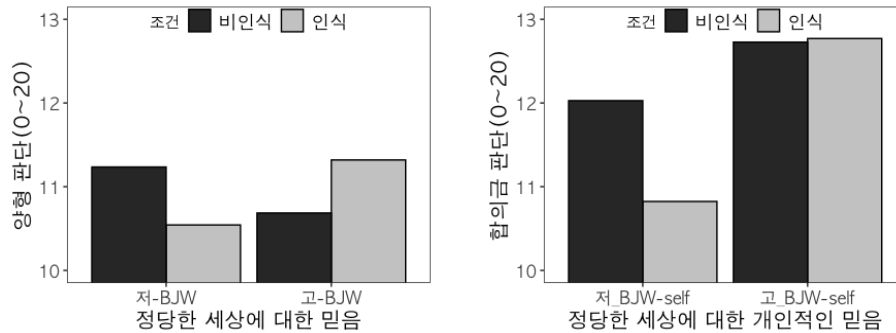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 인식과 양형 판단, 합의금 판단의 관계에 대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

DJW: $\beta=.12, p<.05$).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을수록 처벌을 적게 하려고 했고, 반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인식 했을 때는 가해자를 더 많이 처벌하려고 했다.

또 피해자 인식과 합의금 판단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에 의한 조절효과($\beta=.14, p<.05$)가 나타났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때는 믿음이 강할수록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1을 통해 제3자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의 신원이 함께 제시하는 처치만으로는 처벌과 보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는 특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다수의 피해자(예; 2만명의 기부금 수혜자)와 특정된 한 명의 인식 가능한 피해자(예; ‘7살의 00는 어디에 살고 있다’)를 제시하고 기부를 얼마나 할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추상적 다수와 특정된 대상을 비

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법정 상황이라는 특성상 두 조건 모두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이미 특정되었고 조건 간 차이는 이름, 나이 등의 신상 정보의 유무 여부였다. Small과 Loewenstein(2005)은 대상의 신상을 모른 채 특정인물로 구체화되는 것만으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피해자가 특정된 본 실험에서 신상정보의 유무에 의한 효과가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판단과 관련해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를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피해자 특성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다음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2

배심원제에서 교통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외적 특성이 배심원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판단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본 실험의 가설이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피해

자 특성 조건에서 비인식 조건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나타날 것이고 부정적 피해자 특성 조건에서는 더 낮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검증하고자 기존 시나리오에서 피해자 특성을 조작한 ‘긍정인식’, ‘부정인식’의 두 조건을 구성해 실험1의 비인식 조건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를 제외한 참가자 모집과 설문 구성, 실험 절차는 실험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실험1과 동일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였다. 추가 모집한 참가자는 137명(온라인 70명)으로 기존의 비인식 집단과 합하여 총 206명(남성 101명)이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하였다. 조건 별로 비인식 조건의 참가자 67명(남성 34명), 긍정인식 68명(남성 33명), 부정인식 68명(남성 35명)이었다. 참가자는 19세부터 30세로 평균 연령 24.63($SD=3.01$)이었다.

측정도구

교통사고 시나리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1의 시나리오를 조작하여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통제조건에 해당하는 ‘비인식’ 시나리오에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행(性行) 정보를 추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Williams와 Bargh(2008)는 타인을 인식할 때 따뜻함-차가움의 차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긍정인식’ 조건에서는 응답자가 피해자를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친절하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매사에 밝은 사람이라고 묘사(V_p : Victim positive)하였다. 반대로 ‘부정인식’ 조건의 응답자가 피해자를 차갑게 인식하도록 과거 폭행 등 범죄 이력이 있고 아르바이트 물품을 횡령하는 등의 경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사람으로 서술(V_n : Victim negative)하였다. 시나리오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이때 피해자의 성행 정보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판단을 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법적 양형인자들을 배제하고 작성하였다(양형위원회, 2016). 추가로 모집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 및 보상판단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

비인식, 긍정인식, 부정인식의 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의 분석은 실험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실험2의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의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속 피해자를 응답자가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작점검을 수행하였다. 00대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해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 시나리오를 각각 21명과 25명의 서로 다른 집단에게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세 가지로 ‘대상을 얼마나 따듯하거나 차갑다고 느끼십니까?’(온도), ‘대상을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십니까?’(긍정/부정), 그리고 ‘대상을 얼마나 돕고 싶으십니까?’(도움의지)였고 모두 1점부터 7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인식 조건의 피해자(온도:M=5.78, SD=.94, 긍정/부정:M=5.78, SD=1.08, 도움의지: M=4.68, SD=1.79)를 부정인식(온도:M=2.35, SD=1.19, 긍부정:M=2.39, SD=1.37, 도움의지: M=2.19, SD=1.41)의 피해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따듯하게($t(51)=11.66, p<.001$), 더 긍정적으로($t(51)=9.46, p<.001$) 인식하였다. 또 도움의지에서도 긍정인식의 피해자를 더 돕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1)=5.09, p<.001$).

피해자 특성 효과

그림 3은 실험2의 조건에 따른 양형 판단과 합의금 판단의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제3자의 양형

판단과 합의금 판단을 비교한 결과 양형 판단(비인식:M=10.93, SD=3.47, 긍정인식:M=11.52, SD=2.86, 부정인식:M=10.67, SD=3.37)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F(2,203)=.84, p>.05$) 합의금 판단(비인식:M=12.36, SD=3.37, 긍정인식:M=13.21, SD=3.58, 부정인식:M=10.02, SD=4.13)에는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203)=13.55, p<.001$).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인식과 부정인식 집단, 긍정인식과 부정인식 집단 간 합의금 판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평균 양형 및 합의금인 10점과 비교했을 때, 긍정인식 집단에서 1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양형 판단($t(68)=4.45, p<.001$)과 합의금 판단($t(68)=7.47, p<.001$)이 나타났다. 즉, 피해자 특성이 긍정적일 때에도 역시 ‘가해자 처벌 편향’과 ‘피해자 보상 편향’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실험1과 동일하게 참가자들의 공감 성향,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처벌, 보상 판단 간의 상관분석과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1과는 달리 종속변인과 IRI나 BJW의 요인들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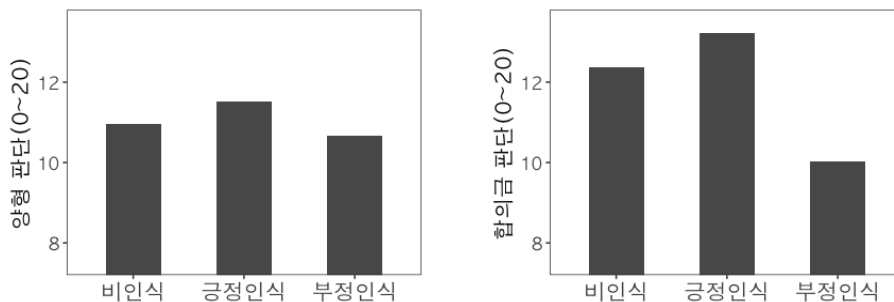


그림 3. 실험2 각 조건의 평균 양형판단과 합의금판단 그래프

았다.

실험2의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신상정보의 추가를 통한 피해자 인식이 제3자의 직관적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실험1의 결과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피해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실험1의 비인식, 인식 조건과 같이 실험2의 긍정조건에서도 역시 가해자 처벌 편향과 피해자 보상 편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논의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도움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시나리오를 통해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대상에 대한 인식 가능 여부를 조작했던 이전의 연구와 달리 피해자 특성을 조작해 제3자의 처벌과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나아가 제3자의 공감과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해 제3자 처벌 및 보상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 실험1에서 법적 판단을 위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를 함께 제시한 조건을 구성하였다. 이를 서로 다른 집단에게 제시한 뒤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실험2에서는 법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을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으로 조작한 두 조건을 추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과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건에 대해 판단할 법률적 요인이 부족할 때, 참가자들은 이전 판례의 평균과 같거나 더 높은 양형, 합의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 특성에 의해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단이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의 피해자와 긍정적 피해자 보다 낮은 보상을 하려 했다. 넷째, 참가자는 피해자가 익명일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낮은 가해자 처벌을 했고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을 알 때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판단을 했다.

실험1과 실험2의 주효과에 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인식과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해자 특성이 피해자 보상에만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도움행위의 증가 현상에 제한된 반면, 본 연구의 효과는 도움행위의 범위가 법적 판단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 피해자 보상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가해자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Small, Loewenstein, Strnad(2006)이 주장했던 인식 가능한 타인 효과는 본 연구의 법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부 상황에서 기부금 수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름, 나이, 사진 등)은 사람들의 도움 행위를 증가시킨다(Erlandsson et al.,

2015; Slovic, 2007; Small & Loewenstein,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아는 것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법적 판단 요인이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의 양이 부족했거나 혹은 신상정보의 유형이 적절하지 않아서, 즉 실험 처치의 부족으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부금 수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가 기부의도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Nisbett & Ross, 1980; Jenni & Loewenstein, 1997). 또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수혜자의 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높은 기부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nevsky, Västfjäll, Slovic & Knutson,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름과 나이, 키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였다. 배심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만큼의 생생한 묘사가 부족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 외적 요인인 피해자의 특성을 조작한 것이 보상에는 영향을 미쳤던 반면 처벌에는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가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의도를 높이는 것(Small & Loewenstein, 2005)과 별개로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처벌 편향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네 가지 조건 중 부정인식을 제외한다면 세 조건에서 모두 가해자 처벌 편향이 나타났다. 피해자 인식이나 피해자 특성 효과가 가해자에게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가해자

처벌편향의 효과보다 유의미하게 처벌의도를 높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실험1과 실험2의 처벌에 대한 주효과인 피해자 인식 효과(.01)와 피해자 특성 효과(.16)의 효과 크기(Cohen's d)를 두 실험의 통제조건에 해당하는 비인식 조건의 가해자 처벌 편향(.68)의 효과크기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는 이전 판례의 처벌과 보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처벌,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범죄 시나리오는 법적 판단을 위한 법률적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였고 피해자 인식 조건과 피해자 특성 조건 모두 양형 판단을 위한 법적 가감형 인자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었다. 또 양형과 합의금 판단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서 20점 척도 중 평균인 10점을 해당 사건의 평균 양형과 합의금으로 제시했을 뿐이었다. 즉,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법적 판단을 위한 준거는 이전 판례의 평균뿐이었고,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법적 판단을 한다면 응답은 10점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전 판례의 평균인 10점보다 높은 양형과 합의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olman, Pettit과 Wiesenfeld(2013)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이 모호할 때, 판단자의 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가해자에게는 기존의 판례보다 더 높은 처벌을 피해자에게 더 높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편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피해자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상과 처벌 판단이 나타났다. 불운한 피해자를 목격

했을 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발현된다. 자신의 믿음과 현실 간의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불공정한 상황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도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Lerner & Simmonds, 1966). 반대로 피해자에 상황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도움행위가 감소할 수도 있다(Reichle, Schneider & Montada, 1998; Lerner, 1980). 본 연구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모두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인식한다면 피해자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피해자의 불운한 피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을 때에는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졌는데, 교통사고의 책임을 역명의 피해자에게 있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1의 두 조건에는 참가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실험2의 피해자 특성을 조작한 조건들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던 실험1의 조건들에서만 판단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종의 휴리스틱(hueristic) 판단이 나타난 것이다. 또 피해자의 평소 성행에 대한 정보가 교통사고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을 만한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은 에이즈 환자나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특정한 맥락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다(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kogut, 2011).

또 본 연구에서는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공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공감과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공감 연구(Davis, 1983)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공감이 유의미하게 남성 보다 높다는 공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t(135)=-4.06, p<.001$). 또 비인식 조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합의금 판단을 하는, 성별에 따른 보상 판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약하게 유의미하였다.(여성: $M=13.11, SD=3.54$, 남성: $M=11.62, SD=3.06, t(65)=1.86, p=.061$). 하지만 이런 보상 판단에 미치는 성별 간의 차이가 성별 간 공감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배심원의 공감이 처벌 및 보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몰입을 유도할 만큼 생생하게 묘사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배심원제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종속변인들 중 하나인 가해자 처벌에서는 피해자 인식과 피해자 특성 조작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 처벌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험 처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척도의 준거점에 의해 판단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척도의 경우, 법적 판단의 준거점이 부족한 시나리오를 읽고 기존 판례의 평균 양형, 합의금의 수준으로 제시한 10점에 대해 정박 효과(anchor effect)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처치를 더 강하게 하거나 혹은 척도를 수정하는 방식

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 연구로서는 드물게 사고 피해자의 인식 여부 및 피해자 특성을 조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또한 중요한 의의이다. 기부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는 순수하게 무고한 기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주변의 평판 등 성행정보를 통해 질적으로 조작했고 이것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기부의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수혜자 특성을 조작하는 시도 또한 가능할 것이다. 특정 수혜자를 인식하는 것보다 수혜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의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 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충분한 사전 교육과 배심원들 간의 토의를 거치는 실제 배심원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판관과 배심원들의 법적 판단에서의 휴리스틱 사고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문제이다(공영호, 2016). 배심원 개인의 편향이나 대상에 대한 인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보다 공정한 배심원제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전 연구(최승혁, 허태균, 2012;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법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배심원제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의 부족은 배심원들의 인지적 편향을 유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는 특정 사건 피해자의 실명과 사연을 전면내세워 제3자의 도움행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피해자 신상과 법률 외적 특성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명법안은 대중의 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 가해자 처벌 의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법 모두에서 중요한 연구 문제일 수 있다. 특히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실명법안의 효과는 기부 캠페인에서 나타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와는 달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민식이법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 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손현수, 2017; 김태규, 2018; 허정현, 2019). 또 한편에서는 과잉처벌의 논란과 함께 실명법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범죄 처벌 강화의 법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와 같은 사회 심리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 일, 기선완, 김성은, 정범석, 황지희, 송지은, 김지웅 (2009).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8(5), 352-358.
- 공영호 (2016).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홍익법학*, 17(3), 451-473.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

- 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 689-710.
- 뉴시스 (2018.09.12). 靑,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 답변...“기존 규정 엄정히 적용”.
- 법률신문 (2017.09.08). “잔인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 여론 속... 법조계는.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양형위원회 (2016,05,15) Retrieved from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 이지혜, 박우정,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 최수형 (2011). 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0), 227-250.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 한국일보 (2019.11.18).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처벌 더 강화” 청원 등장.
- 한국일보 (2019.11.19). 과잉 처벌?...끝나지 않은 민식이법 논란.
- 홍완식 (2016). 실명법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3(2), 511-529.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267-299). New York: Academic Press.
- Batson, C. D., Sympson, S. C., Hindman, J. L., Decruz, P., Todd, R. M., Weeks, J. L., ... Burns, C. T. (1996). “I’ve Been there, Too”: Effect on Empathy of Prior Experience with a Ne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5), 474-482.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Erlandsson, A., Björklund, F., & Bäckström, M. (2015). Emotional reactions, perceived impact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mediate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proportion dominance effect and in-group effect respective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7(0), 1-14.
- Fetherstonhaugh, D., Slovic, P., Johnson, S. M., & Friedrich, J. (1997). Insensitivity to the value of human life: a study of psychophysical numb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4, 283-300.
- Genevsky, A., Västfjäll, D., Slovic, P., & Knutson, B. (2013). Neural Underpinnings of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Affect Shifts Preferences for Giving.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3(43), 17188-17196.
- Hamilton, D. L., & Sherman, S. J. (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2), 336-355.
- Jenni, K. E., & Loewenstein, G. F. (1997). Explaining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4(3), 235-257.
- Jordan, M. R., Amir, D., & Bloom, P. (2016). Are empathy and concern psychologically distinct? *Emotion*, 16(8), 1107-1116.

- Kogut, T. (2011). Someone to blame: When identifying a victim decreases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4), 748-755.
- Kogut, T., & Ritov, I. (2005). The “identified victim” effect: An individual group or just a single individual.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8(3), 157-167.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I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 Lerner, M. J. & Simmonds, C. H. (1966). Observers' reaction to the “innocent victim”: Compassion or rej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03-210.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oewenstein, G., Small, D. A., & Strnad, J. (2006). Statistical, identifiable, and iconic victims. *Behavioral Public Finance*, (1), 32-46.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olman, E., Pettit, N. C., & Wiesenfeld, B. M. (2013).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moral licen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614-623.
- Reichle, B., Schneider, A., & Montada, L. (1998). How do observers of victimization preserve their belief in a just world-cognitively or actionally?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In L. Montada, & M. J. Lerner (Eds.), *Responses to victimizations and belief in a just world* (pp. 55-64). New York: Plenum.
- Schelling, T. C. (1968). The life you save may be your own. In S. B. Chase (Ed.), *Problems in Public Expenditure Analysi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 Sherman, S. J., Beike, D. R., & Ryalls, K. R. (1999). Dual-processing accounts of inconsistencies in responses to general versus specific cases. In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pp. 203-227). New York: Guilford Press.
- Sjöberg, M. P.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tringency of Punishment in Mock Jurors. *Journal of European Psychology Students*, 6(1), 37-44.
- Slovic, P. (2007). If I look at the mass I will never act: Psychic numbing and genocid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2), 1-17.
- Small, D. A., & Loewenstein, G. (2003). Helping a victim or helping the victim: Altruism and identifiabil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6(1), 5-16.
- Small, D. A., & Loewenstein, G. (2005). The devil you know: The effect of identifiability on punitivenes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6(1), 5-16.
- Vitaglione, G. D., & Barnett, M. A. (2003). Assessing a New Dimension of Empathy: Empathic Anger as a Predictor of Helping

- and Punishing Desires. *Motivation and Emotion*, 27(4), 301-325.
- Williams, L. E., & Bargh, J. A. (2008).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promotes interpersonal warmth. *Science*, 322(5901), 606-607.
- 1 차원고접수 : 2020. 02. 15.
심사통과접수 : 2020. 06. 02.
최종원고접수 : 2020. 07. 15.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InBeom Choi

ShinWoo Kim

Hyung-Chul O. Li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Identifiable victim effect refers to the tendency of greater sympathy and helping behavior to identifiable victims than to abstract, unidentifiable ones. This research tested whether this tendency also affects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in jury context for public's legal judgments. In addition, through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in such legal judgment, we intended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putting the victim's real name and identity at the forefront, which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related crimes by gaining public attention and support. To do so,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hypothetical traffic accident scenarios that controlled legal components while manipulating victim's identifying information. In experiment 1, each participant read a scenario of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or a nonanonymous victim that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ge (identifiable condition) and made judgments on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The results showed no effect of identifiability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but moderation effect of BJW was obtained in the identifiable condition. That is, those with higher BJW showed greater tendency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for identifiable victims. In Experiment 2, we compared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against a well-conducted victim (positive condition) and ill-conducted victim (negative condition) to test the effects of victim's characteristics on punishment for offende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results showed lower compensation for an ill-conducted victim than for an anonymous one. In addition, across all conditions except for negative condition, participants made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higher than the average judicial precedents of 10-point presented in the rating scale. This research showed that victim's characteristics other than legal components affects third-party's legal decision making. Furthermore, we interpreted third-party's tendency to impose higher punishment and compensation with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and proposed social and legal discussion for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 Identifiable victim effect, the bill named for victim, punishment, compensation, belief in just world

부 록

각 조건 별 교통사고 시나리오

비인식 조건

익명의 보행자가 늦은 오후 길을 걷던 중 어떤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길바닥에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리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인식 조건

신설동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28세의 이민후 씨는 늦은 오후 길을 걷던 중 어떤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길바닥에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민후 씨는 다리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길을 걷던 이민후 씨를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약 170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 이민후 씨는 평소 고시원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총무를 병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인식 조건

신설동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28세의 이민후 씨는 늦은 오후 길을 걷던 중 어떤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길바닥에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민후 씨는 다리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길을 걷던 이민후 씨를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약 170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 이민후 씨는 평소 고시원 독방에서 혼자생활하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총무를 병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이민후 씨는 자신이 후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청소봉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고 한다. 이민후 씨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늘 밝은 모습으로 생활했으며, 봉사활동 중 인연을 맺은 분과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고 한다.

부정인식 조건

신설동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28세의 이민후 씨는 늦은 오후 길을 걷던 중 어떤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길바닥에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민후 씨는 다리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길을 걷던 이민후 씨를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약 170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 이민후 씨는 평소 고시원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총무를 병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이민후 씨는 전단지 수 천 장을 몰래 빼돌려 폐지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민후 씨는 불법채류자와 사기결혼 및 상습폭행으로 수배 중이었으며 경찰을 피해 고시원에 숨어 지냈다고 한다.